‘보이스피싱 늪’ 인가…광주만 확 늘었다

지난해 715건으로 전년보다 2배 급증…타지역 대부분 감소와 대조
올 피해액 54% 늘어…경제난 버티다 저금리 대출 유혹에 피해 분석
보이스피싱 주요 활동무대로 떠올라 작년 TF팀 만든 광주경찰 머쓱

#.A(61)씨는 지난해 11월 13일, ‘H몰에서 436달러가 결제됐으니 본인이 아닐 경우 문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했다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농협 적금 3000만원이 불법 자금에 연루돼 확인해야겠다’는 말을 듣고 목포에서 만난 금감원 직원이라는 인물 B씨에게 속아 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B씨는 A씨 등 4명에게 5차례에 걸쳐 현금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붙잡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C씨는 지난 3월 31일 은행 직원이라며 현재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자신의 기존 대출정보 등을 알려주고 가짜 은행 앱을 통해 신규 대출을 신청했다. C씨는 이후 기존 고금리로 대출받아 상환 중이던 은행에서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타 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라며 걸려 온 전화에 속아 현금 1500만원을 건넸다.

광주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활동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경찰이 지난 1년 간 테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안간힘을 썼지만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 지난 1년 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난 지역은 광주와 충북 등 2곳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지역은 지난해 715건이 발생, 2019년(358건)에 견줘 무려 99.7%가 급증했다. 충북이 2019년(976건)에 비해 8.4% 늘어난 것에 비하면 피해자들이 폭증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도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에 비해 줄었다. 울산의 경우 982건→619건으로, 36.9%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다.뒤를 이어 전북(35.9%), 경북(34.5%), 전남(34%), 세종(29.0%) 순이었다.

광주는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도 급증세다. 지난 18일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무려 261건. 지난해 같은기간 235건이 발생한 것보다 11% 증가했다. 피해액은 더 많다. 올해 피해액은 65억8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2억8000만원)에 비해 54% 나 늘었다.

피해를 본 시민들의 91%(64억 5000만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데 속아 큰 돈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힘겹게 버티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없는 돈마저 내어주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광주 경찰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며 광주경찰청 전 부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까지 만들었는데도 전국 최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다. 금감원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년도와 바뀐 게 별로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란 미지수다. 국회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관련법 제·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거나 통신사 의무를 높이는 방식,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 거래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사기 개념에 포함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지만 국회의 관심은 미온적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현금 인출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도입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19~2020년 전국 시·도 경찰청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단위:건〉

구분	2019	2020	증감
서울	10494	9049	13.7%↓
부산	2032	1804	11.2%↓
대구	1282	1003	21.7%↓
인천	2260	2048	9.3%↓
광주	358	715	99.7%↑
대전	1434	1014	29.2%↓
울산	982	619	36.9%↓
세종	117	83	29.0%↓
경기남	6990	5953	14.8%↓
경기북	2443	1851	24.2%↓
강원	1345	1139	15.3%↓
충북	976	1058	8.4%↑
충남	1281	1267	1.5%↓
전북	970	621	35.9%↓
전남	616	406	34.0%↓
경북	2097	1372	34.5%↓
경남	1425	1205	15.4%↓
제주	565	474	16.1%↓
합계	37667	31681	15.8%↓

〈경찰청 제공〉

5·18기록관, 1일부터 관람 인증 이벤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공동으로 관람 인증 이벤트를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5월을 맞아 5·18기록관과 문화전당역 5·18기념홍보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시 관람 인증샷 이벤트는 도시철도 문화전당역 4번 출구에 있는 5·18기념홍보관과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시, 5·18기록관 전시실을 관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선착순 200명에게 물병 또는 에코백을 증정한다.

또 문화전당역을 이용한 인증 게시물을 올린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월일기장 뱃지를 증정하고, 광주도시철도공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매주 10명에게 뱃지를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18기록관 인스타그램(@19800518_mh)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무), 5·18기록관 인근에 위치한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수단체 5월 또 시위하나…집회 신고에 갈등 예고

5월을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광장 등에서 집회를 신고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 턴라이트 등 2개의 보수단체는 오는 5월 18일까지 무려 한 달간 전일빌딩, 금남로 4가 등 4곳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41주년 5·18 기념행사를 이 공간에서 치를 예정이라는 점에서 자칫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5·18행사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행사위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5월 내내 광주 도심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5·18행사위가 5월 기념 행사 장소를 선점한 만큼 양측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이 방치 숨지게하고 냉장고 보관한 엄마 징역 5년 선고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엄마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께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당시 7세)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당시 2세)을 피해 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폭언·욕설 민원인 제압 이렇게 29일 광주 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 민원인의 폭언, 욕설, 공무원 협박 등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이 열린 가운데 방림지구대 경찰관들이 특이민원인을 제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제공〉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어”…헌법소원 각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검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개정 공수처법 6조 5항과 6항 등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하도록 하는 등 처장 추천과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7년 이상 변호사의 경력’ 등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와 관련된 조항이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11719	1	남구 대남대로85번길3, 102동 12층 1204호 [방림동,방림명지로드힐] 84.882㎡	아파트	340,000,000 340,000,000	
2020타경 14701	1	남구 화산로31번길17, 303동 6층 605호 [진월동,진월3차삼익세라믹아파트] 59.40㎡	아파트	122,000,000 122,000,000	
2020타경 15032	1	북구 호동로99, 101동 8층 801호 96.64㎡	아파트	186,000,000 186,000,000	2021타경82[중복]
2020타경 75232	1	북구 북문대로159번길39, 103동 1층 110호 [운암동,일신아파트] 59.82㎡[김홍중[1/2 지분소유)]	아파트	49,500,000 49,500,000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0타경 75898	1	북구 첨단연신로216, 104동 19층 1901호 [신용동,첨단2지구제일풍경채] 84.2363㎡	아파트	495,000,000 495,000,000	
2020타경 76761	1	서구 마재로65, 101동 8층 804호 [금호동,마재마을송촌파인힐아파트] 84.75㎡	아파트	245,000,000 245,000,000	관리비미납[3,500원]
2020타경 77030	1	남구 경열로76번길33-5, 9층 902호 [월산동,제일파크맨션] 66.73㎡	아파트	107,000,000 107,000,000	
2020타경 77146	1	남구 봉선1로87, 105동 12층 1305호 59.91㎡	아파트	155,000,000 155,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13845	1	곡성군 입면 입석리 10 650㎡	대	137,591,500 137,591,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다용도실51.6㎡]포함
		곡성군 입면 입석하입길 105-55 93.03㎡ 제시외 다용도실 등 51.6㎡	단독주택		
2020타경 75423	1	서구 천변좌로108번길 20-5 32.60㎡ 제시외 창고 등 63.1㎡[제시외건물포함,현황점유자송영도제시외건물수리비20,000,000원유치권이있음을주장한다고기재됨]	단독주택	150,667,000 150,667,000	일괄매각.이재섭으로부터금24,650,000원의유치권신고가있으나성립여부불명
		서구 양동 439-54 144㎡	대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14077	1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산6-1 7727㎡	임야	728,645,000 728,645,000	일괄매각
		동소 산6-2 496㎡	임야		
		동소 산6-4 422㎡	임야		
		동소 산7 23456㎡	임야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13029	1	서구 회재로1050, 3층 303호 [풍암동,캐슬온리뷰] 29.2424㎡	근린시설	109,000,000 109,000,000	
2020타경 13241	1	북구 저불로62, 7층 701호 [용봉동,썬오피스텔] 47.88㎡	근린시설	62,000,000 62,000,000	2020년3월부터관리비미납
2020타경 13876	1	북구 서양대로315번길20-7, 205호 [우산동,주건축물제1동] 40.74㎡	근린시설	112,000,000 112,000,000	
2020타경 14169	1	동구 천변우로339, 101동 13층 1306호 [수기동,수기동제일오피스텔] 60.00㎡	오피스텔	58,000,000 58,000,000	관리비미납[2020.11기준1,290,000원]
[자동차,중기]					
2020타경 11405	1	사용본거지:전남 나주시 오포길 41-11 [영산동] 등록번호:26우0608 차명:투산 연식:2016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3송암주차장
2020타경 75249	1	사용본거지:전남 목포시 산정동 양을로57번길 2-2 등록번호:09우0216 차명:레이 연식:2014	자동차	6,000,000 6,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2021타경 60640	1	사용본거지:광주 남구 효우로 332-10, 104동 402호[행암동,제일풍경채에듀파크1단지] 등록번호:66다8399 차명:E300 4Matic 연식:2014	자동차	25,000,000 2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우산천변길67-17,서창다리주차장
[기타]					
2020타경 7437	1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1198-7 6599.8㎡	공장용지	2,137,738,800 2,137,738,800	일괄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포함.기호[3-다]건물은현황일반창고및실험실로이용중.지상소재이동가능한저온저장창고1개동및컨테이너2개동매각제외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길 84 [제1동] 공장 828.28㎡ 제시외 기계실 26.3㎡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 잡곡 마이크로 크래셔 시스템외 6식[제시외건물[기계실26.3㎡]포함][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기계기구목록은별지와같음]	공장		
		동소 84 [제2동] 490.22㎡ 부속건물 냉장창고 66.56㎡[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기계기구목록은별지와같음]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5. 14.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5. 21. [금]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